

2020년 2월 12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온라인·통신 : 2020년 2월 11일 16시 이후 보도 가능)

기획재정담당관 과 장 김정주(044-201-1311), 서기관 김호균(1317), 사무관 이원형(1324) / 제공일: 2월 10일(총 12매)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업·농촌 구현 - 농식품부 「2020년도 업무계획」 발표 -

◆ 금년도에는 국민께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람과 환경 중심 농정개혁'의 틀을 정착

◆ [공통주제] 농업·농촌 일자리 지원 대책

① 농업일자리 현황 분석

- △ (현황) '17.6월 이후 '19.12월까지 농림어업 고용은 증가세 유지(31개월째)
- △ (분석) 2040세대는 농업을 새로운 직업으로 인식, 5060세대는 은퇴 이후 삶을 위해 농업·농촌을 선택

② 산업혁신의 선도형 일자리 창출

- △ 농지·시설, 전문교육 등 2040세대의 농업 창업 지원 강화
- △ 스마트농업, 민간투자 등 기술·자본 투입 확대
- △ 신남방·신북방 등 수출시장 다변화

③ 지역혁신의 따뜻한 일자리 창출

- △ 교육·정보제공 개선으로 5060세대의 체계적인 귀농 준비 지원
- △ 생활SOC 복합센터 확충, 사회적 경제를 통해 보건·의료·돌봄·교육 등 사회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로컬푸드로 지역 공동체 활성화

◆ [부처핵심과제] 공익직불제 안착

- △ (지급구조) 일정요건을 갖춘 0.5ha이하 소규모농가는 경지면적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 지급(소농직불제), 그 외 농가는 면적이 작을수록 높은 단가 지급
- △ (준수의무) 환경·생태계 보전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공익증진활동을 강화하고,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연차별로 활용 수준 제고
- △ (관리강화) 직불금 신청·관리 시스템 및 농지관리 강화

(1) 행사 개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11일(화)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과 당·청 주요인사, 농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 환경부와 합동으로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 이날 행사는 '일자리'를 주제로 민간의 일자리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을 국민께 보고하고, 민간 참석자(농식품 분야 11명 포함 총 40여명)들로부터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자리였다.
 - * 슬로건: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 더 좋은 일자리, 반등을 넘어 체감으로
- 농식품부는 '미래를 여는 열쇠,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업·농촌'을 주제로 올해 주요과제를 보고하였다.

(2) 지난해 농정 추진성과 및 평가

- 이번 정부들어 농식품부는 쌀값 회복·관세화, 가축질병 방역 등 각종 현안에 적극 대응하여 농가소득 향상과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하였다.
- 또한, 공익직불제 법률 제정('19.12월), 스마트팜 전국 거점 조성 등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틀 전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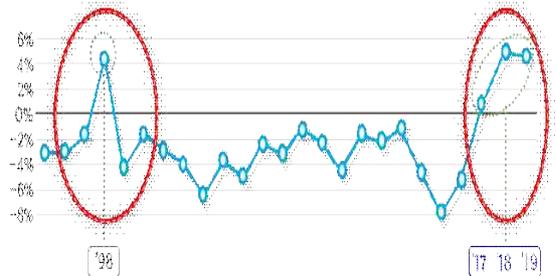
- ▲ 쌀값 안정: ('17) 153,213원/80kg→ ('18) 193,568→ ('19) 189,964(평년 대비 20.6%↑)
- ▲ 농가소득: ('15) 37,215천원/가구→ ('16) 37,197→ ('17) 38,239→ ('18) 42,066
- ▲ 농업통상: 쌀 관세율 513% 확정, 파프리카 중국 수출검역 협상 타결('19.11월)
- ▲ 가축질병: 아프리카돼지열병 타지역 확산저지, 구제역('19.1월~)·AI('18.3월~) 미발생
- ▲ 성장동력확충: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 선정(상주·김제 착공, 고흥·밀양 설계)

- 다만, 농업·농촌의 인구 감소, 고령화 심화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적인 일자리 지원대책과 공익직불제 안착 등 농촌경제 안정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 농식품부는 올해 ▲농업·농촌 일자리 지원, ▲공익직불제 안착을 중점 과제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3) 농업·농촌 일자리 지원 대책

1 농업 일자리 현황 분석

- 최근 농림어업 취업자수를 보면, '19년 1,395천명으로 '16년 대비 122.4천명이 증가*('17.6~'19.12월까지 31개월째 증가세)했고, 고용이 회복된 '19년에만 55천명이 증가했다.



<'95년 이후 농림어업 고용 증감률(단위: %) >

* 농림어업취업자: ('16) 1,273천명→('17) 1,279→('18) 1,340→('19) 1,395(전년 대비 55↑)

- 그 이유는 베이비부머 세대('55~'63년생, 약 711만명)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귀농·귀촌이 사회경제적 흐름으로 이어지고,
- 규모화·법인화 등 우리 농업의 구조변화로 고용여력이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농업법인(천개소)/상용근로자(천명): ('15) 18/40→ ('18) 22/55

- 세대별로 보면, 2040세대는 농업을 새로운 직업으로서, 5060세대는 은퇴 이후 삶을 위해 농업을 선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 자영자 ■ 무급가족종사자 ■ 상용·임시근로자 ■ 일용근로자 ■ 합계



- 취업·승계 등 미래 창업 준비
- 기술집약형 농업 선호
- 전문성을 갖춘 청년들이 유입
* 스마트팜 보육센터 교육생 중 비농업계 출신이 75.3%



- 전원생활과 낮은 생활비 (75~80% 수준)
- 소규모 과수원 또는 채소재배(텃밭) 선호
- 영농 규모 확대보다 병원 등 생활여건에 관심

- 농식품부는 이러한 흐름이 가속화되도록 청년과 도시은퇴자의 안정적인 창업 및 농촌 정착을 뒷받침한다.

② 산업혁신 선도형 일자리 창출

○ 2040세대가 농식품분야에 창업할 때 주로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농지·시설, 교육·컨설팅, 판로지원을 확대한다.

* 농지 및 시설확보(54.5%), 수준에 맞는 교육 부족(46.5%) 「'20.1월, 갤럽조사」

- 현재도 농지은행에서 2040세대에 농지를 우선 지원하고 있으나, 충분치 않은 상황이므로 청년들이 원하는 지역의 유휴농지를 적극 개발하여 농지 공급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 농지은행 유휴농지개발임대사업 등 청년농 농지공급물량 확대('19: 1,697ha→'20: 2,240)

- 시설농업을 선호하지만,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농업에 쉽게 진입하지 못하는 청년들을 위해,

- 저렴한 비용으로 창업이 가능한 임대형 온실(30개소)과 스마트팜(혁신밸리 4개소+지역특화 2)을 조성하고, 심층창업컨설팅*을 신설하여 청년들의 투자실패 가능성을 줄이는 데 집중한다.

* 청년농 대상 경영+품목 컨설팅→ 최적 투자방식과 필요 역량 자문 제공

- 아울러, 기존 청년농업인의 역량향상(중급→ 고급)을 위해 현장지도(문제해결형)·학습조직·전문가 교육을 결합한 '스텝업 기술교육과정'도 확충한다.

- 청년 특화형 직거래 장터*와 온라인 소셜커머스 내 청년농 판매관 개설 등 新유통경로 발굴을 지원한다.

* 청년농의 마케팅 계획을 공모방식으로 선정·지원(신규)

○ 자금지원 확대, 스마트농업 확산 등 기술·아이디어 바탕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한다.

- 잠재력과 아이디어가 있는 경영체가 쉽게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영 파머스 펀드*(100억원)'와 '징검다리펀드**(215억원)'를 신규 조성하여 혁신 창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창업단계(스타트업)에서 기술력·잠재력 있는 경영체에 소규모 투자+전문컨설팅

** 성장단계(스케일업)에서 규모화된 경영체로 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

- 작물 생육·환경 빅데이터 수집·제공 플랫폼을 구축하고, AI 기반 완전 자동화 스마트팜 개발 R&D를 추진*(과기부 협업)한다.

* 사업단 구성, 연구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21~'27년 3,867억원 투입 예정)

○ 신남방·신북방 등 수출시장을 다변화하여 농식품 시장을 확대한다.

- (신남방) 베트남 등에서 인기인 딸기는 모종 공동 재배와 선도유지 포장재·설비 지원으로 수출물량 확대 및 품질을 개선한다.

- 포도는 수출국 선호규격품 생산을 위해 주산지(상주·김천 등)별 수출농가 전문교육을 강화한다.

- 한류 활용 마케팅, 현지 식문화와 연계하여 수요처를 발굴한다.

* 태국(K-CON 연계), 베트남(한-베 음식문화축제)

- (신북방)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2개국)을 신규지원하고, 청년해외 개척단 파견(몽골·카자흐·러시아 53명)등을 통해 신규 거래선을 적극 발굴한다.

* 국가별 유망품목: 몽골(소스류), 러시아(홍삼류), 극동(신선농산물) 등

- 수출업체와 물류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3월)하여 수출물량을 공동 적재·운송하는 공동운송 사업을 시범 추진(중양아·몽골)한다.

3 지역혁신의 따뜻한 일자리 창출

- 귀농 전 교육과 정보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5060세대를 위해 사전 준비 교육을 강화하고, 통합 정보제공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 귀농교육 수요가 많은 특·광역시와 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도시지역(13개시)은 도시농협을 귀농 교육·상담 창구*로 새롭게 활용하여 도시민의 귀농·귀촌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 * 자산관리, 세제, 금융 등 도시농협의 전문성을 살린 특화과정 운영
 - 기존의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품목·기술 교육 외에 농촌이해·귀농설계 교육을 보강하여 교육의 질을 높인다.
 - 귀농·귀촌 교육생 DB(농정원·기술센터)를 활용하여, 지자체가 귀농지역 탐색, 지원정책·일자리·주거 등 귀농 희망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귀농귀촌 통합 정보 서비스'를 운영한다.
-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간과 공공부분의 서비스 기능이 부족한 농촌에 생활 SOC를 확충하고 지역공동체의 역할을 강화한다.
 - 보건·의료·돌봄·교육 등을 복합적으로 지원하는 농촌형 생활 SOC 복합센터를 차질없이 조성('20년 104개소)하는 한편,
 - 서비스 취약지역은 협동조합, 공동체 회사 등 사회적경제조직(10개소 모델개발·시범지원)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보완하고,
 - 농업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돌봄·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장도 확대('19: 18개소→ '20: 30)한다.

○ 시민사회-지자체가 지역 내 먹거리 생산·소비에 대한 계획을 수립*(푸드플랜, 64개소)하고 공공급식에 로컬푸드 공급을 확대한다.

* 지자체 푸드플랜 수립(누계 기준) : ('19) 46개 → ('20) 64 → ('22) 100

- 아울러, 마을공동체가 운영하는 판매장·식당에서 지역 중소 농·사회적 농장이 생산한 농산물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로컬푸드 판매장: ('19) 469개소 → ('20) 680

[4] 공익직불제 안착

□ 농업계의 숙원이었던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 제정 ('19.12월)됨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되며,

○ 관련 예산은 지난해 국회단계에서 최종 2.4조원이 반영되었다.

□ 농식품부는 공익직불제가 환경과 생태 보전 등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제도로 자리매김하도록 세부 이행방안 (2~3월 확정)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 우리 농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0.5ha 이하 소규모농가는 경지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 수준 지급 방안(직불제 개편 협의회 제시안)을 검토하되, 일정자격 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에 한해서만 지급한다.

* 농촌거주 및 영농기간 3년 이상, 농외소득 일정액 미만 등

- 그 외 농업인의 면적직불금은 경지면적이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책정하고, 쌀 과잉생산 개선과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해 논·밭 진흥지역의 단가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 아울러, 농업·농촌의 공익적 역할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농약과 비료사용량의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환경관리, 생태계 보전, 공동체활동, 먹거리 안전 등 농업인 준수 의무를 강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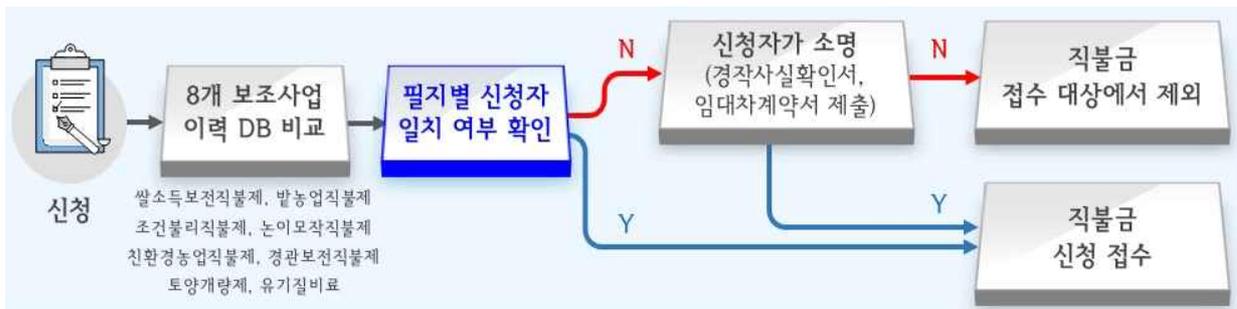
* '30년까지 농약사용량 20%(11.3kg/ha → 9.0), 비료사용량 26%(268kg/ha → 198) 감축

- 다만, 공동체 활동 등 신규 도입 의무는 현장 수용성을 감안하여 연차별로 활동 수준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부정수급 여부를 사전점검 가능한 방식으로 전환하고, 각 단계별 (신청·점검·사후관리) 관리를 강화한다.

- 직불금 신청시 보조사업 이력DB를 비교하여 필지별로 신청자와 경작자의 일치 여부를 시스템상에서 확인하고,
-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가 경작사실확인서·임대차계약서 제출 등 소명토록 하여 직불금 부정수급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직불금 사전점검 흐름도>



○ 또한, 농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수탁시 기존 임차 관계를 인정하고 농지 면적 제한을 폐지하는 등 제도도 개선하여 농지은행 수탁을 촉진할 계획이다.

* (기존) 신규취득 3년 내 → (개선) 신규취득 5년 내 + 불법임대 우려 농지

□ 끝으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20년은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혁신을 이루어 내겠다"고 밝히면서, 농업·농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국민들께서 가져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참석자	주요 이력	사 연
스마트팜 운영 (박아론 전태병)	만나CEA 공동대표 카이스트 졸업생 2인이 설립한 친환경 스마트팜으로 70명의 직원이 있음 청년 스마트팜 대표 성공사례	"젊은 직원들로 구성된 우리 회사는 아쿠아포닉스농법을 통해 미국 농무부로부터 친환경 인증을 받았습니다. 스마트팜 해외 수출도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사회적기업 대표 (오천호)	에코맘의 산골이유식 대표 지역 인력과 지역농산물을 활용해 이유식을 제조하는 사회적기업	"사업 실패 후 고향인 하동으로 귀농하여 어려움이 있었으나, 농식품부 창업지원 등을 통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전 직원을 지역 내 인력으로 고용 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 교육생 (이하영)	98년생 청년창업보육센터 교육생 젊은 여성 농업인으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교육에 참여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음	"중학생때부터 농사에 관심이 있어 농고에 진학했습니다. 이제 청년창업보육센터에서의 교육을 바탕으로 딸기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회적 농장 (박 미)	사회적 농장(선거웰빙푸드) 운영 - 범죄·폭력 피해자 대상 프로그램 운영	"정부의 사회적농업 지원으로 지역 고령인들, 범죄피해자들 대상으로 원예치료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치유 효과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벤처창업 (김태훈)	(주) 푸디웜 대표 곤충을 원료로 한 반려동물 사료 생산 창업 3년만에 매출액 10억원 목표, 고용인원 12명 달성	"농식품부 창업지원을 받아 곤충을 원료로 한 반려동물 사료를 생산 하고 있습니다. 타분야에 비해 저평가된 농식품 분야에 대한 별도의 평가체계나 지원 프로그램이 더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석자	주요 이력	사 연
스마트팜 승계농 (문민호)	전남 화순 파프리카 스마트팜 운영 對 일본 수출액 44백만원	"농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수 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을 신축 하여 농산물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청년 창업농가 (박덕수)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 대상자 한국농수산물대 졸업 후 경북에서 사과 농사	"경영학과를 졸업하여 은행을 다니다 농업의 성장가능성을 보고 한국농수산물대에 진학했 습니다. 이후 정부에서 주는 영농정착자금을 통해 사과 농장을 열심히 꾸려가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대표 (추경미)	열린부뚜막협동조합 대표 로컬푸드로 직장인, 단체 대상 점심 식사 케이터링 사업 운영	"로컬푸드가 경력단절 여성 에게 일자리를 주었습니다. 지금은 봉사센터 등과 연계해 소외계층을 위한 음식을 만들어 배달하는 자원봉사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승계농 (이누리)	고창이엠 실장 한국농수산물대 졸업생, 승계농	"아버지의 뒤를 이어 땅콩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융복합인 중센터 지원을 받아 판로가 확대되었고, 덕분에 마을 어르신들께 소일거리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영농조합 대표 (이규원)	경남딸기원모 영농조합대표 딸기 원모장 사업을 통해 농가 생산성 및 소득향상에 기여	"병충해의 사전적 관리를 통한 육묘의 질적 향상을 이루어, 수확생산량을 점차 늘리고, 해외수출을 통한 농업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 **농업인과 국민 경제에 가장 밀접한 사안인 농산물 가격안정과 가축질병 차단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

* 양파·마늘('19.7월, 기상호조, 생산↑), 가을배추('19.11~12월, 잦은 강우, 생산↓)

**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서 최초로 발생('19년 14건)

① 농산물 가격 급등락 최소화

○ 관측방식을 전환*(전화→ 실측)하여 농업관측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생산자를 조직화하여 사전적 자율적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

* 5대 채소류(배추·무·고추·마늘·양파) 표본농가(5,612호) 대상 재배면적 및 생육단계별 작황, 수확기 생산량 등 실측 조사('20.1월~)

** 일정기준 이하 저품위 상품 자율폐기, 출하규격 및 시기 조절 등

○ ICT 기술을 활용한 산지(공판장, APC 등)와 소비자 유통주체 간 플랫폼 구축('20.상)을 하고 다양한 대안적 유통경로를 확산

○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 구매(농식품바우처) 지원 실증연구 착수,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24만명), 임산부 대상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공급(45천명) 등 국산 농산물 수요기반을 확대해나갈 계획

* (예시) 기존 식품비(생계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50% 이하 취약계층

② 가축질병 발생 및 확산 차단

○ 가축전염병 바이러스의 주된 유입·확산 요인인 축산차량 관리를 강화 하고 사육환경도 개선하는 한편, 농가의 가축질병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

* 축산차량 관제 고도화('20.6월), 농장 시설기준 강화('20.하), 사육밀도 상시점검 등

- 농가의 방역의무를 구체화(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20.4월) 하고, 미준수 시 제재도 강화(가전법 시행령 개정, '20.하)

○ 효율적인 방역체계를 갖추기 위해 역학조사의 전문성·신속성을 높이는 한편, 질병병원체 연구, 진단법·백신 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실행·관리할 수 있는 종합 연구기구 설립 검토('20년 연구용역)

일자리가 늘어나는 활기찬 농업

확실한 창업 지원



-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 공급 확대('19: 1,697ha → '20: 2,240)
- 투자 실패를 줄이기 위한 심층 창업·투자 컨설팅 도입 (2억원 이상 투자자 대상)

안정적 성장 지원



- 문제 해결형 스타트업 기술교육과정 도입 : 중급→고급으로 역량 도약
- 청년 특화형 직거래 장터 개설 : 청년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구현

민간투자 활성화



- 스타트업의 가능성에 투자하는 '영 파머스 펀드' 조성(20년 100억원)
-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징검다리펀드' 조성 (20년 215억원)

스마트농업 확산



- 스마트팜 창업보육 확대: '18: 45명 → '19: 97 → '20: 200
- 농업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민간 개발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



신남방 수출액
'19: 14.2억불 → '20: 15.6



신북방 수출액
'19: 2.6억불 → '20: 2.7

사람이 돌아오는 따뜻한 농촌

귀농귀촌 서비스 접근성 향상



- 도시지역 농협에서도 귀농귀촌 상담, 교육 등 서비스 제공
- 수요자에게 먼저 정보를 제공하는 귀농귀촌 통합 정보제공 서비스 운영

농촌 생활의 변화



- 농촌 생활SOC 복합센터 확충 (20년 104곳)
- 사회적 농업(사회적농장 30곳, 거점농장 4곳 선정) 확산

활기찬 농촌 경제



- 국가 중요 농업유산, 찾아가는 양조장, 국유림 등 특색 있는 관광상품 개발
- 신활력 플러스 지원으로 지역 특화산업 육성(30개소)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실현되는 대한민국

중소농업인 소득안정



- 0.5ha 이하 농가는 소농 직불금 연 120만원 수준 검토

농지의 효율적 이용



- 논, 밭 작물간 지급 단가 차이 완화

농업인의 위상 변화



- 식량 생산자 → 공익적 가치의 창출자

농산물 가격 급등락 최소화

생산자 중심의 수급 조절



- 생산량 관측 고도화(전화조사→실측)
- 수급이 불안한 양파·마늘 부터 생산자 의무자조금단체 설립

대안 유통경로 활성화



- 전국통합 온라인 거래 플랫폼 구축(20.상)
- 지역 푸드플랜 수립 지자체 확대 ('19: 46개 지자체 → '20: 64)
- 로컬푸드 판매장('19:469개 → '20:680)

국민 먹거리 지원



- 취약계층 농식품 바우처 시범지원 (연간 48만원 상당)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시범공급 (4만5천 명, 월2회)

가축질병 걱정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축산차량 관리



- 농장 수준별 차량 출입관리 기준 마련
- 축산시설과 차량 관리 강화

농장단위 방역강화



- 축산 정보 시스템 활용, 농장 점검 강화
- 농장별 온라인 방역관리카드 도입

방역지원체계 개선



- 역학조사 전문성·신속성 강화
- 동물질병 종합 연구기구 설립 검토